

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

- 지식기반강국 e-Korea 건설 -

2001. 6. 1.

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
변재일

내용구성

- 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- II. 정보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
- III. 2001년도 정보화 정책방향
- 지식기반강국 e-Korea 건설
- IV. 맺음말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정보통신부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1. 국가 정보화 추진경과

- 인터넷 시대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그간 정부는 정보통신부 설치 등 정보화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준비를 통해 체계적, 종합적 국가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

효율적 정보화추진체계 정립

- 정보통신부 발족('94.12),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('95.8)
-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('96.4)
-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설치('96.6)
- 통신사업 경쟁체제 도입 (전기통신사업법 정비)

정보통신부

4/27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국가사회 정보화 중장기 비전 제시

-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('96.,6)
 - 국가 정보화의 비전제시와 정보화촉진 중점과제 추진
 - 5개년 계획,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
- '99.3월 'CYBER KOREA 21' 수립('99-2002)
 - 기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정, 보완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정보화의 청사진 제시
 - 새로운 기술발전 및 선진 각국의 정보화 정책 방향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2. 주요 성과

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

-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기간망 조기 구축
- 세계 최초로 전국 10,400여개 모든 초·중·고교에 인터넷 무료접속 제공
-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로 '사이버 아파트' 확산
- 전국 196개 면 지역, 176개 읍지역까지 ADSL 서비스 제공(2001. 2월)
- 전체 가구의 75%가 PC 보유 (약 1,070만 가구, 2001. 2월)
 - 베스트사이트, 한국갤럽 공동조사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진전

- 주부, 장애인, 군인 등 전국민 300만명 정보화 교육 실시
↳ 인터넷 이용자 : 2,093만명
1Mbps 이상 고속인터넷 이용 : 548만 가구, 전 가구의 38% (2001. 4월)
- '95년 이후 각 부처의 136개 법령 제·개정
- 정보격차해소법 ,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등 역기능에 대응
- 사이버 커뮤니티·사이버 주식거래(61.5%) 확산, 사이버 정치문화 확산
(16대 총선후보의 57.8% 인터넷 유세, 포스닥 등)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IMF 위기 극복의 견인차

-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, '98년 이후 연 20.7% 성장
- 2000년 정보통신 생산 142조원, 수출 512억불, 무역흑자 157억불
◆ 각각 전체의 23.1%(부가가치 기준), 29.7%, 133.1%
- 2000년 - IT 벤처 창업 7,343개, IT 분야 순 고용증가 13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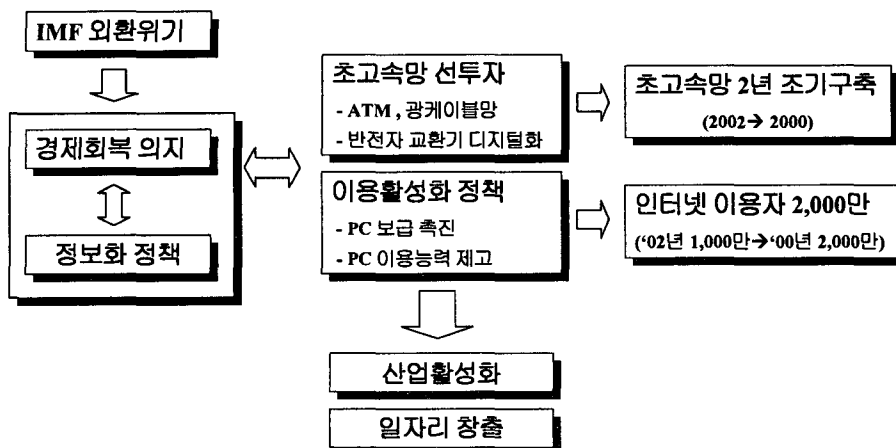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▶ Cyber Korea 21의 주요 계량적 목표 및 달성현황

구분	CYBER KOREA 21		현황
	1998년	2002년(목표)	2000년말
인터넷 이용자	300만명	1,000만명	1,904만명
인터넷 연결 학교수	1,613개교	전 초중고교	전 초중고교
전자상거래 시장규모	550억원	3조 8천억원	약 7조원
PC 보급대수	663만대	1,500만대	1,500만대
정보통신산업생산	90조원	136조원	133조원
정보통신산업수출	301억불	471억불	510억불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▶ Cyber Korea 21 목표 달성 원인



I.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

3. 평가

- 인프라 구축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

	인터넷 이용자	전체인구 대비	고속인터넷 이용가구	전체가구 대비
한국	1,904 만	41.3%	400 만	28.6%
미국	16,881 만	61%	1,170 만	11.1%
일본	1,690 만	13.3%	64 만	1.4%

⇨ 그러나, 질적·가시적 정보화 목표달성에는 다소 미흡

-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정보화 응용노력과 구조조정과 정보화의 전략적 연계 미흡
-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제도와 관행의 정착 지연
- 기존 산업의 정보화 지연으로 신산업-기존산업의 성장격차 발생
- 정보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, 조세부담 증가 등에 대한 저항

II. 정보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

II. 정보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

1. 국제적 IT 환경 변화

- 최근 경제적으로 미국경기침체에 따른 신경제 회의론
사회적으로 정보화 회의론 대두



- 미국의 10년 장기호황에 이은 경기침체, 나스닥 폭락
- Old Technology와 New Technology의 전환 부진, 투기적 투자행태
- 인터넷은 몇 가지 습관만 바꾸었을 뿐, 근본적 변화유발은 없다는 시각

II. 정보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

2. 인식과 대응방향

- 최근 상황은 경기순환에 따른 조정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
- 정보화 '도입기'를 지나 '성숙기'에 접어들면서 일시적 경기영향
- 또한 정보화 투자효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U자형으로 발생
- H/W외에 조직, 인력배치, 교육, 의식 등에 대한 보완 필수



정보기기 도입외에 시스템·구조 개혁차원의 정보화 접근 필요



IT를 기반으로 경제·사회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질적인 투자 지속

III. 2001년도 정보화 정책방향 - 지식기반강국 e-Korea 건설

정보통신부

기본방향

그동안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
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



-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 ⇨ 국가투명성·경쟁력 제고
- IT 산업의 적극 육성 ⇨ 세계 IT 생산기지화
- 통신사업 구조조정 ⇨ 경쟁체제확립·대외경쟁력

정보통신부

16/27

III. 2001년도 정보화 정책 방향

1.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

가. 디지털 정부 구현 촉진 지원

- ▶ 2002년까지 디지털 정부기반 완성 등 공공분야 정보화를 통해 국가운영시스템 혁신
 - 내부업무 전자화 - 전자 결재율 제고(55%→75%), 전자문서 유통 전국 확대
 -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- 시군구 행정정보화, 정부대표 전자민원실
 - 공공부문 e-Business 도입 확대 - 조달 전자화 확대(금년 말 80%수준)
 - 공공기관 소모성물품(MRO) 구매 시 e-Marketplace 활용 촉진
- ❖ 우정사업본부 : 1개월 이용결과 약 28% 예산절감 효과, 전 부처 이용시 연 230억 절감

1.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

나. 디지털 경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

- ▶ 인터넷 비즈니스, 기업정보화 등 민간부문 정보화를 촉진
 - 정보화 수준이 낮은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
 - 공단지역 고속인터넷 우선보급, 중소기업 3만명 정보화 교육
 - 중소기업 규모별 ASP 시범사업 실시, 기업정보화 순회설명회 개최
 -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, 인터넷 산업 활성화
 - * 2000년 국내 인터넷 산업 규모 약 40조원, 고용 75,000명
 - M&A, 기업가치평가, 정부조달 등 관련 법제도 개선
 - '닷컴기업 e-biz 활성화 지원단' 구성·운영, 150억원 '인터넷기업전용펀드'
 - 전자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자서명 이용자 1,000만명 확대 (2002년)

1.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

다.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

- ▶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수요에 대응
 - 인터넷 트래픽은 약 6개월 마다 2배 증가
 - 주요도시간 초고속기간망 용량 확충 : 수십 Giga급 → 2005년 수십Tera 급
 - 2005년까지 가정에서 평균 10M, 이동시 최고 2M 서비스 제공
 - 고속인터넷 가입자 금년 600만, 2002년 850만 가구(전체의 60%) 이상 확대
 - 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구축 추진

1.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

라.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

- ▶ 정보소외지역의 정보접근기회 확대 및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강화
 -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
 - 고속인터넷 확충 : 정보화촉진기금 1,500억원 융자지원
 - 우체국 정보화교육장(25개소), 읍·면·동사무소 등에 정보이용시설(150여개)
 - 1,000만명 정보화 교육 (2001년 400만명 목표)
 - 자영업자 10만명(3-10월), 주부 200만명 정보화교육 (-2002년)
 - 장애인용 기기개발, 콘텐츠 개발·보급, 통신요금 감면 확대

1.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

라. 정보화 역기능 해결

- ▶ 공공과 민간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,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
 -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강화
 - 금융, 국방, 통신 등 주요시설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, 예방체계 강화
 -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, 민간중심 분야별 정보공유·분석센터설립
 - 불법·불건전 사이트 단속강화 및 시민자율정화 운동 활성화
 - 자살, 폭탄제조 등 반사회적 불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, 의법 조치
 - * 외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법상 불법인 도박사이트 등은 ISP에서 차단
 - 온라인 민간감시망 구축, 온라인 실명사용 자율운동 전개

III. 2001년도 정보화 정책 방향

2. IT산업의 적극 육성

가. IT인력 기반 공급 확충

- ▶ IT인력 수급 현황
 - * 세계 : 약 200만명 부족(미국 85만, 유럽 120만 추정)
 - * 국내 : 약 4만 3천여명 부족(2000.9월)
 - 2005년까지 14만 2천명 추가 부족, 특히 석사 이상 고급인력 1만 1천명 부족
 - 2005년까지 IT 전문인력 20만명 추가 양성, 금년 31,500명 양성 추진
 - 단기대책 : 우수인력 해외유학지원(200명), 해외우수대학 교육프로그램 지원
 - 중장기 대책 : 정규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

2. IT산업의 적극 육성

나.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

- ▶ IT 기술개발 투자 확대 : '00년 5,670억원 → '01년 7,358억원
- 고속라우터 등 장비국산화,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(2005년까지 80% 수준)
- 4G 이동통신, 광인터넷,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개발
- 국제공동연구, 국제기구 진출 등 글로벌 차원의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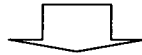
다. IT 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

-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 활동 지원 - 창업공간, 종합시험환경 구축
 - IT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
 - IT 전문투자조합(1,000억원), IT 벤처투자마트, IT중소기업 경영지원단
 - 해외 IT 지원센터 신설, 수출선 다변화 지원
 - 중남미 · 중동 시장 개척, 중국 · 동남아 진출 확대
- ⇨ 2001년 수출 580억불, 무역수지흑자 160억불 달성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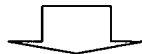
III. 2001년도 정보화 정책 방향

3.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

- ▶ 정보통신사업은 음성 → 데이터, 유선 → 무선으로 중심이동 추세
- ▶ 세계 대형통신사업자의 대형화 · 종합화, 유 · 무선 통합



국내 통신사업자 : 과당경쟁 · 중복투자로 수익성 · 경쟁력 악화



- 시장규모에 맞는 유효경쟁체제 정착
- 업계 자율로 M&A, 진입 · 퇴출이 상시 가능한 시장여건 조성

IV. 맺음말

정보통신부

IV. 맺음말

▪ 우리나라 정보화수준은 양적 지표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

- 인터넷 이용자 : 전 인구의 45.4%
- 초고속서비스 가입자 : 548만 가구('01.4월말) 인구대비 세계 1위
- 국가 도메인(.kr) 등록건수 : 세계 3위 (영, 캐나다, 한, 독일 순)

▪ 우리의 정보화 성과는 세계도 인정

- Asiaweek : 낮은 가격·경쟁도입으로 한국은 세계 초고속인터넷 중심 ('00.10)
- Time Asia :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의 인터넷 활용사례 소개 ('00.12)
- Wall Street Journal - 양과 질 모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국가 ('01. 5)

정보통신부

26/27

IV. 맺음말

- 그러나 아직 의식, 행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숙도는 부족
 -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, 관행에서 벗어나
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과 문화가 필요



- 인터넷 이용자 3,000만 시대를 겨냥하는, 실효성 있는 정보화 정책 마련
- 정부·기업의 디지털화 촉진, 국가전반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 혁신